

‘전남 국립의대 신설’ 동·서부간 갈등 격화되나

순천대·목포대 설치 법안 동시 상정

김문수 “의료불균형... 동부권 설치를”
김원이 “서부권 섬 등 의료공백 심각”
道 “공정·합리적 공모 방식 통해 추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김원이(목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동시 상정됐다.

전남도가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까지 상정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의대 설치 특별법안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나란히 상정됐다.

‘순천대 의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며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해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

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국립목포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국립순천대에 무상 양어 및 기금 조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도 이날 교육위에 나란히 상정됐다.

김원이 의원(목포)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며 “전남 서부권 등 섬 지역 중증 응급 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

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취약지인 목포에 의대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개의 법안은 앞으로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목포와 순천 2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정치인이 의대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적인 법안을 내 서

로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여서, 오히려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이 걸출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남도는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어느 하나의 대학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가 신속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고,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해야 정부에서 의대 신설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두 대학의 공모 참여를 요청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숨고르기’

법사위, 의결 보류... 추가 논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은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9개 법안과 청원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법안 의결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

다. 또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청문회 등의 과정을 지켜본 뒤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전 상징 자체를 문제 삼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지도부 출범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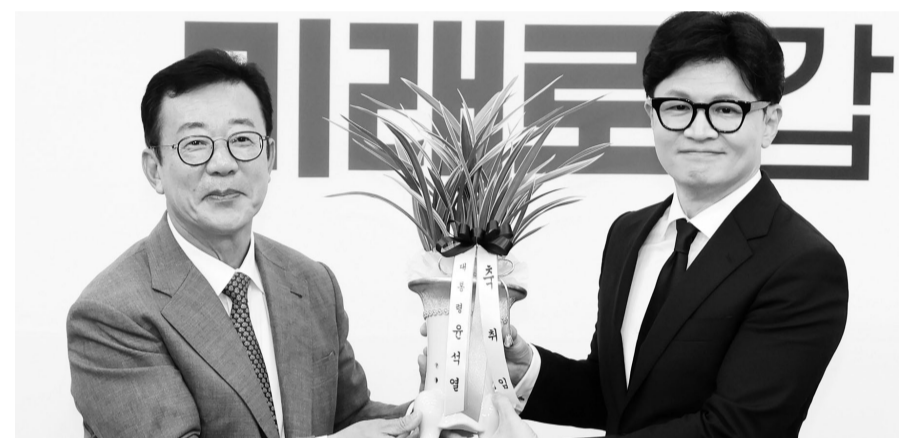
친윤계 “원내대표 의사 우선” 韓 “제3자 추천 특검 그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 이견을 표출하는 등 충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걸로 보기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되물자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

면서당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투톱 체제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란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이래저래 할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에 대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대안’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 최고위원들의 특검법에 대한 원내대표 전권 발언 주장에 대해선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고 당내에 최고위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다. 이견을 좁혀가는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민주혁신 “최고위원 특정후보 지지 없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가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더혁신, 민형배 최고위원 후보 반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혁신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은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더혁신을 비판했다”며 “더혁신은 지난 17일 예비경선 후 회의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2일에는 민 후보를 포함한 소속 구성원 8명을 소개하는 웹자보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혁신은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출마한 강위원 상임대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민 후보의 낮은 득표율을 더혁신을 호도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다”며 “부디 호남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박 의원의 노력이, 8명의 국회의원 담합으로 후보가 추대되는 등 관행으로 기득권화되고 있는 광주 민주당의 퇴행을 바로 잡는 일과 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민주 광주시당, 5·18평화 이진숙 ‘지명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5·18 평화에 동조한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 후보자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대우 후보의 유튜브에 출연해 추켜세우고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담은 인쇄물을 배포해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상실하고 국



민의힘을 탈당한 허식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며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5·18 헌법전문 수록’ 의지와도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즉각 이진숙 지명과 허식 복당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복되는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의 문화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우원식 “채상병 특검·방송4법 순차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4당 조선의원들에게 ‘제22대 국회 개원식 촉구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방송4법’을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된 법안을 내일(25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다”며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강대강 대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을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공적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

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안에 마땅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 구실로,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